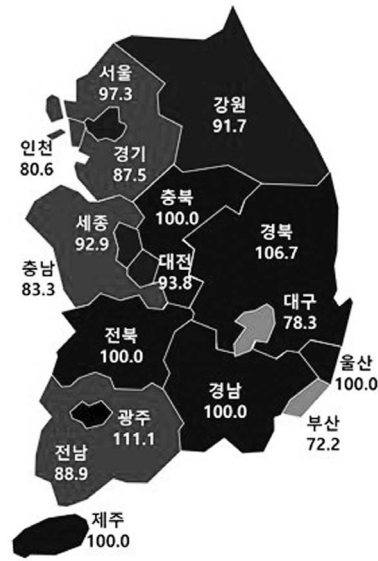


반도체 호재에 광주 분양시장 ‘훈풍’… 전망지수 전국 최고

2026년 8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11.1’ 전월보다 22.9p 급반등 호전 기대감 대출규제 속 수도권 위축 대조…전남도 상승세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분양시장 기대감은 오히려 살아나며 비수도권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3.2로 전월보다 5.6p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는 전월보다 22.9p 급등한 111.1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전망지수를 보였다. 전남 역시 88.9로 전월보다 상승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4.0p 하락한 88.5를 기록하며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

서울은 분양전망지수가 114.3에서 97.3으로 급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12.5p씩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

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일부 지역 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이 사업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주특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영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등이 금융규제 부담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지방 미분양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미래자·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서남권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전남 역시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8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7.6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2.9p 올랐다.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 영향으로 분양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계절적 비수기와 청약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88.1까지 하락했다. 미분양 전망지수도 91.0으로 낮아졌지만 감소 폭은 제한적 이어서 지방의 누적 미분양 물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첨단산업 개발 호재와 공급 부족 등이 금융규제 부담을 일부 상쇄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됐다”며 “다만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적체 등은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영광 배터리시설에 1800억 투입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0호로 선정돼 1798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포항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10호 사업으로 선전된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일원에 최대 방전용

가프로젝트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0호 선정 호남 반도체 산단 육성 전력 인프라 확충

량 기준 80MW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말 준공 후 내년 초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

최대 저장용량은 480MWh로 최대 방전용량 80MW 기준으로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하고,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등 3대 메

정부 재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할 뒤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돼 10개 사업, 총사업비 4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235@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 상호금융 사업방향 공유

하반기 건전결산·보이스피싱 근절 다짐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5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지역농협 상임이사 및 전무, 신용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안정적인 상호금융 사업추진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유동성 관리방안 및 연체 감축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뤘다.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농협별 경영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올해 건

전결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또 이날 행사 중에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실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고객 홍보활동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이철호 본부장은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건전결산을 이뤄내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지역농협 상임이사 및 전무, 신용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이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낙찰가율이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매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아파트 낙찰가율은 82.8%로 전월보다 1.7%p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85.4%로 전월보다 1.5%p 하락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경매건수가 전월 대비 26% 늘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가운데 낙찰률도 27.7%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전남광주 아파트 경매시장도 ‘온기’ 낙찰가율 82.8%… 전국 1년4개월만 최저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755건으로 전월보다 1.5% 늘어 올들어 가장 많은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낙찰률은 37.3%로 3.8%p 상승했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5.3명으로 줄었다. 경매 물건은 늘었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낙찰 가격은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광주는 전국적인 관망세 속에 서도 낙찰가율이 상승하며 지방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방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는 뚜렷했다. 강원은 낙찰가율이 83.8%로 전월보다 12.1%p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대전도 84.2%로 2.3%p

상승했다. 전남광주 역시 82.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울산은 전월보다 16.0%p 급락한 78.7%를 기록했고, 부산도 78.8%로 4.9%p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다시 70%대 이하로 내려앉았다. 전북(76.9%)과 충남(81.3%), 경북(75.5%), 제주(80.4%) 등도 일제히 낙찰가율이 하락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지만 평균 응찰자 수는 감소했다.

경기 역시 낙찰률은 상승했지만 낙찰가

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물건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입찰에 나서는 양상이 뚜렷했다.

업계에서는 광주특별시의 낙찰가율 상승을 실수로 중심 시장이 유지된 결과로 보고 있다. 투자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물건에는 꾸준한 응찰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하락세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낙찰가율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전남광주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선별적인 응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지와 상품성에 따라 낙찰 결과가 달라지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반도체 실망감에 코스피 폭락 4.5% ↓…46번째 사이드카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4% 넘게 급락했다. AI(인공지능)·반도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종가 800선을 회복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1.88p(4.58%) 내린 6296.3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6478.75로 하락 출발해 장중 6550.94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이후 매도세가 확대되며 6238.32까지 밀렸다.

수급분별로는 외국인 이 3조327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2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3조338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일 매수 방향 사이드카가 울리는 등 이들 연속 상승장이 이어졌지만, 이날 오전 코스피200선별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방향 사이드카가 울렸다. 올해 들어 총 46번째, 매도 방향으로는 24번째 사이드카 발동이다. 특히 반도체 주도주,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컸다.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 대비 1만5500원(6.3%) 내린 2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7만3000원(10.37%) 내린 149만50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이날 2.08p(0.26%) 오른 801.67에 거래를 마치며 5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2.15p(0.27%) 내린 797.44에 출발했지만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3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지수가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가 연일 이어졌다. 개인이 854억원, 기관이 1615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478억원을 순매도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오비맥주, ‘세계 맥주의 날’ 기념 임직원 체험행사 오비맥주는 ‘세계 맥주의 날’을 맞아 경기 이천공장에서 임직원 대상 맥주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공장 내 맥주 박물관에서 한국 맥주산업의 발전 과정과 오비맥주의 역사, 양조 방식을 견학한 뒤 ‘이천 임직원 쌀’과 ‘장호원 복숭아’, ‘백사천 산수유’를 원료로 활용해 만든 수제맥주를 시음했다. 이어 발효와 숙성, 여과 등 맥주 제조 과정을 배우고 맥주를 병에 담은 병입 공정도 체험했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허위 자료 제출 ‘칼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 원칙 고발 대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허위 제출과 계열회사 누락 등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다.

현행 기준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나 중대성이 높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성이 높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새롭게 도입된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자료 허위 제출이나 신고 누락이 기업집단 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